

## 공익신고와 취재원보호의 법적문제\*

### Legal issues of public interest reporting and reporter protection

정 신 교(Jeong, Shin-Gyo)\*\*

#### ABSTRACT

The protection of reporters is a means to protect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free circulation of information cannot be expected without the protection of the reporters. In addition, if the professional duty and conscience of a journalist are presupposed, the protection of reporters should be guaranteed. Theoretically, the protection of reporters guarantees free press coverage and, along with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 blowers, will serve as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by monitoring authorities in power and satisfying the people's right to know. In this regard, the Code of Conduct for Journalism Ethics stipulates that the identity of a reporter should not be revealed if the safety of the reporter is in danger or there is a risk of being unfairly disadvantaged. In particular, crime-related reports require very thorough security for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as there is a possibility of secondary damage to the informant due to the disclosure of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In additi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 blowers is protected by the relevant laws, and there are penalties for violations.

There are also views claiming that the scope of protection of sources is not limited to professional and professional media organizations and journalists, but rather broad protection in the free press process. Of course, this will have to be considered more carefully. It would be most effective to take legal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sources. This is because it can guarantee their predictability between potential informants and media agencies.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Korean media, which shows problems such as abuse of anonymous reporting, sensationalism, and partisanship, it is also true that the law to protect reporters is sometimes criticized for their right to enjoy privileges. Even if there is no law on reporters, judicial administration should make efforts to protect reporters through the freedom of speech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Key words: Public Interest Report, Reporter Protection, Public Interest Whistle blower, Freedom of the Press, Public Interest Reporter Protection Act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부패학회·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개최한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교수, 법학박사

## I. 서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라는 것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알려주거나 공개 혹은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뿐만 아니라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취재원의 안전이 위험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1항). 특히 범죄 관련 보도는 제보자의 신상이 공개됨으로 인해 제보자의 2차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히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다.<sup>1)</sup>

2019년 6월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YG, 이하에서는 ‘YG’로 약칭)와 경찰의 유착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 모씨의 실명이 특정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공익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공익신고자의 인권과 신변안전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졌다.<sup>2)</sup>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 모씨는 2016년 자신의 마약 관련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YG소속 가수 김 모씨가 마약을 구해 달라고 해서 구해줬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의자 신문조서에 가수 김 모씨의 관련 기록이 없어졌으며 진술 당시 김 모씨의 마약 관련 내용을 충분히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지문 날인을 위해 조서를 보니 김 모씨의 관련 내용은 사라져 있었다고 밝히며 경찰과 YG와의 유착을 의심했다고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에 대해 공적인 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신고(고소, 고발 포함)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언론사가 비실명으로 공익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시정권고소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당 유형의 보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및 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의 고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의견을 언론사에 전달했다. 이후 기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부패행위 보도)를 개정하여 공익신고자, 부패행위신고자, 범죄신고자 등을 포괄하여 보호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 조항<sup>3)</sup>을 마련했다.

1) 권수진·윤성현,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295, 형사정책연구원, 2016, 13면.

2) 소봄이 (2019, 6, 14). “비아이 마약 끝까지 말려...사건 핵심은 ‘양현석’” 한서희가 전한 심경. <세계일보>. URL: <http://www.segye.com/newsView/20190614502974?OutUrl=daum>

3)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언론 보도가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개정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는 다음과 같다.

종래에는 취재원 보호와 관련하여 취재한 정보가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현재는 취재원 보호를 위한 언론인의 특권의 인정여부 문제, 범죄와 관련한 정보원이 공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정보제공자를 확인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허용되는가에 대한 문제 등이다. 지금도 이와 같은 문제는 취재원 보호에 관한 주요한 논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취재원과 공익제보자의 법적 지위와 더불어 미국과 독일의 취재원보호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법·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Ⅱ. 취재원 보호의 일반적 고찰

### 1. 언론의 법적 책임

#### 1) 언론 보도와 명예훼손의 법리

언론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당한 자가 민·형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취재원<sup>4)</sup> 보호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형법 제309조)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해 개인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때 민법 제750조 이하 규정 및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i)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ii)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iii)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iv) 침해 행위의 위법성 등이 명예훼손 책임 성립을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언론보도의 대부분은 일정 부분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구성된다. 즉 취재와 기사작성, 보도행위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 경

제8조(신고자등 보호)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2. 부패행위신고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3.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 취재원이란 뉴스를 취재하는 언론출판 기자들에게 뉴스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원으로, 협의로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뜻하며, 광의로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집필자, 원고의 제공자, 투고자 등을 포함한다. 즉, 취재원은 기자가 취재하려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인적 취재원과 비인적 취재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취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후자는 예컨대 재난현장 등과 같이 그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뜻한다. 이희훈, “취재원 비닉권과 취재원 보호입법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2008. 28면.

우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우리 형법 310조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언론·출판을 통한 사실의 적시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sup>5)</sup> 즉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 2) 취재원 공개와 법적 책임

언론기관과 기자가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보도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도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는 언론보도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범죄관련 보도와 의혹보도의 경우 대부분 취재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문서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증거로 사법기관에 제출하여 보도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지만 말이다. 이 때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취재원의 공개이고 상당성을 입증하는 최선의 방법은 취재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이다. 만약 언론기관이 취재원 보호를 위해 취재원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그 보도의 진실성이 감소하는 경우가 높고, 이 경우 언론기관과 기자는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언론기관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취재원을 공개하여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제되느냐 또는 취재원을 보호하고 법적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취재원의 보호는 수사기관이 언론기관과 기자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취재원 보호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수사기관은 2003년 SBS에 대한 강제수사를 단행하면서 고위 공직자의 향후접대 과정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SBS 본사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고 SBS는 취재원의 보호를 이유로 이에 대한 제출을 거부했다. 2007년은 언론사 신동아에 대한 강제수사가 있었다. 당시 검찰은 기자의 이 메일을 확보하려 하였고 신동아 측은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2009년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의 위험을 보도한 MBC 방송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방송한 제작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기관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강행함으로써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5)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침해 행위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를 거부할 권리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에게 인정된다. 이들은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하고 보관하는 물건인 이상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열거되어 있는 직종에 해당되지 않아 압수·수색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법집행에 대한 거부는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합법적인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압수·수색의 문제에서도 언론은 취재원을 보호할 것인지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 2. 취재원 보호의 연혁

취재원 보호의 역사는 그 연혁이 17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sup>6)</sup> 이 때 미국과 영국의 경우 법원은 소송사건과 관련된 증거소지자가 자발적이거나 출석요구에 증언하거나 그 증거를 제출할 것을 기대하였다.<sup>7)</sup> 이후 취재원 보호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주 헌법과 법률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논의되어 왔으며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인이 취재원을 밝히거나 증언해야 하는 강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것을 언론인의 특권으로 보았다. 이처럼 언론인의 특권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정부가 잘못하거나 행정의 부적절·비효율적이고 은밀한 작용에 관한 정보를 누설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sup>8)</sup> 미국 대다수의 주들은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연방차원의 입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 취재원 보호는 신문의 자유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1877년의 독일제국형사소송법(Reichsstrafprozeßordnung)이나 1874년 독일제국신문법(Reichspressgesetz)에서 증언거부권과 관련된 입법의 시도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1926년 바이마르공화국 형사소송법 제53조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증언거부권의 내용에 있어서 언론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1945년 바이에른주와 헤센 주는 증언거부권을 규정한 주 신문법을 시행하였고 독일 연방차원에서의 증언거부권은 1950년 연방형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제4호와 1953년 연방형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인정되었다.<sup>9)</sup>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12월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의해 취재원 보호를 명문화하였다.

6) Anthony L. Fargo, The Year of Leaking Dangerously: Shadowy Sources, Jailed Journalists, And the Uncertain Future of the Federal Journalist's Privilege, 14 Wm. & Mary Bill Rts. J. 1063, 1068, 2006.

7) 이규호, “기자의 취재원 보호와 증언거부권”, 『민사소송』, 제16권 제2호, 2012, 68면.

8) Amanda A. Konarski, The reporter's privilege is essential to checks and balances being accessible to the American Electorate, 11 Seton Hall Circuit Rev. 258, 2014, p. 275.

9) Martin Löffler/Reinhart 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C. H. BECK, 2005, S. 200-202.

이 법 제8조 제1항은 “언론인은 공표 사항의 제보자 등의 신원이나 공표 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언론인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제8조 제2항은 “기사 내용에 기초가 된 사실을 확인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규정도 삭제되었다.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다른 규정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흡수됐지만,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도 입법적 공백으로 남아 있다. 즉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취재원 보호 조항이 현행법에서 사라졌고,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취재원 보호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4월 17일 취재원 보호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의 제한과 취재원에 대한 보호, 그것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이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자, 검찰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통신내역을 조회하는 등 취재원에 대한 파악에 주력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취재원 보호 법안은 공익제보자의 익명 보호, 보도의 기초가 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수사목적의 취재원에 대한 강제수사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보호의 범위를 법원이나 국회에서의 증언거부도 규정하고 있다.

### 3. 독일과 미국의 취재원보호법

#### 1) 독일

독일은 민사소송법상 기자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이 법에 의하면 “정기간행물,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제작하거나 또는 방영함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협력하거나 협력했던 자”의 증언이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독일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제5호)<sup>10)</sup> 뿐만 아니라 보도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유출되면 정보 제공자의 신원이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기사화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1)</sup> 독일은 언론사나 기자가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증언거부권을 독일기본법과 민사·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언론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다른 직업군 종사자의 증언거부권보다 언론인의 증언거부권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예컨대 의사·변호사 등에 대해 비밀주체가 비밀을 해제한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53조 제2항). 그러나 언론인의

10) 김민정, “취재원보호법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언론과 법』, 제14권 제2호, 2015, 138면

11) 이규호, 앞의 논문 77쪽.

증언거부권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이는 언론인의 증언거부권에 있어 언론의 자유와 결부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즉, 취재원의 비밀보장이 담보될 수 있을 때 언론기관이나 언론 종사자에게 취재원이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더 나아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인의 증언거부권은 개인의 증언거부권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공적인 의사형성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고 자유언론제도는 그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 2) 미국

미국은 1896년 메릴랜드 주에서 최초로 취재원보호법인 일명 방패법(Shield Law)이 제정되었고, 현재 40개 주에서 언론인의 취재원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재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sup>12)</sup> 이 법의 현대적 해석은 197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시한 ‘브랜즈버그(Branzburg) 대 헤이스(Hayes)사건에서 비롯됐다.<sup>13)</sup> 이 사건의 발단은 미국 켄터키 주의 루이빌쿠리어 저널의 폴 브랜즈버그 기자가 1969년 두 명의 젊은이가 마리화나에서 해시시를 제조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작성한 기사를 보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켄터키 법원과 대배심원은 브랜즈버그 기사를 소환해 취재원이었던 두 젊은이들의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브랜즈버그 기자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을 강요받는 것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기자들은 취재과정에서 취재원 보호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원을 밝히게 되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취재원과 취재물의 보호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외적으로 범죄와 명백하게 관련된 정보이고, 그 정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만큼 중요하고 또한 그 정보가 사회적 이익에 압도적일 때에 한하여 취재원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브랜즈버그 사건 이후, 미국 법원들은 기자가 취재원의 관련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은 미국 미디어법의 역사에 가장 크게 기여한 판결로 남아있다. 해당 사안에서 언론사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취재원에 대한 기자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는 주요한 판례로 인용되고 있다.

12) 이규호, 위의 논문 70쪽.

13) Branzburg v. Hayes, 408 U.S. 665, 92 S.Ct. 2646, 33 L.Ed.2d 626, 1972.

〈표 1〉 미국의 취재원 보호법 요약

구분	언론인 증언거부권
수정헌법 제1조에서의 보호	'브랜즈버그(Branzburg) 대 헤이스(Hayes)' 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을 부인하였으나 하급법원들의 재해석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연방(federal) 법률에서의 보호	없음
주(state) 법률에서의 보호	방패법(Shield Law)이 1896년 메릴랜드 주가 최초로 제정하였고 현재 40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음

### Ⅲ. 취재원 보호의 법·정책적 개선방안

#### 1. 취재원 보호 가이드라인

언론인의 최고의 가치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이는 일반국민에 대한 것이고 저널리즘은 이러한 진실에 대한 확인이 그 본질이다. 이를 위해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언론인의 당연한 의무이다. 또한 취재원보호는 법령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켜져야 하며 언론인의 취재원보호에 대한 특권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인은 보도와 관련하여 독립적이어야 하며 전문가로서 언론인의 의무와 양심이 전제된다면 취재원보호는 당연한 가치이다. 현행법상 취재원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앞의 사례(YG)에서 보듯이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취재원에 대한 보호는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보호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고려한 취재원의 보호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현재 언론보도에서 범죄 사건만을 다루는 취재원보호준칙은 없다. 각 방송사는 자체 심의 규정, 방송보도 심의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의 경우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범죄보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범죄행위의 미화하지 말 것, 모방범죄를 유발하지 말 것, 범죄피해자의 인권침해의 금지, 범죄 전과나 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히 다룰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BBC)의 범죄보도 가이드라인은 범죄를 유발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료의 방송금지, 범죄 수법에 대한 상세묘사나 시연 등은 범죄행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 이후 언론인을 소환할 때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이를 지침으로 삼고 있다. 미국 연방규정(28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가 참고해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주요내용은 언론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원칙이며 정보의 이익과 정당한 법집행간의 이익형량에 의해 결정하도

14) 조재현, “공정보도를 위한 취재원보호의 입법방향”, 『한국법학회보』, 제23권 제2호, 2018, 89면.



록 하고 있다. 이는 언론인의 소환할 경우 소환이전에 다른 방법에 의해 정보취득을 먼저 고려하고 언론사, 배심, 법원 등과 대체방법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면 첫째, 민·형사 사건의 보도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보도를 제한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용으로부터 언론사의 구성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언론인으로부터의 정보요구는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이익, 언론의 자유 등 핵심적 가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법기관이 언론인을 소환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i) 언론인의 정보수집과정에서 범죄와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은 그러한 위반사항을 모두 제시해야 할 것, (ii) 범죄를 유발한 공적인 정보 또는 언론을 통하지 않은 출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하며, 그 정보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있어서 필수적 요건일 것, (iii) 언론인에 대한 소환은 본질적이 아니고 사소하거나 추측에 의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사건에도 동일하다. (iv) 언론인의 소환이 국가의 안보,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성 등과 같은 중요성이 없다면 언론인과 협상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만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하며 이를 설명해야 할 것, (v) 소환장의 발부는 보도된 정보의 정확성, 정보확인에 의해 제한될 것, (vi) 소환장의 발부는 정보수집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며, 직접적으로 정보와 관련된 자료만을 합리적인 시간 등을 지켜서 발부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자료의 제출은 금지된다.

## 2. 취재원 보호의 입법방안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를 위한 특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취재원보호법이 외적으로는 언론인의 취재와 보호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법의 진정한 역할은 취재원 또는 제보자의 보호를 통해 정부나 사기업 분야의 비리나 범죄를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취재원과 제보자들의 정보는 정부와 기업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운용하는가에 대한 평가에 대해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따라서 취재원과 제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인 취재원보호법은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와 더불어 언론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왜냐하면, 정부와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프로그램 제작 활동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면 언론의 감시기능은 약화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해서는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입법방안에 대해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든지 언론기관에게 언론의 자유와 직업윤리에 반하여 취재원 공개를 강제할 수 없게 규정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제보자와 취재원이 자신의 속해있는 기관에 의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피해를 받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언론기관, 기자, 제보

자, 취재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언론보도로 인해 제보자나 취재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수사기관이 언론기관과 기자를 대상으로 취재원에 대한 정보취득을 위해 수사내지는 보도된 내용의 기초자료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언론기관과 기자가 취재원과 제보자와 관련된 정보와 언론보도의 기초사실에 대해 법원과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언론기관과 기자에게 취재원이나 제보자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요구 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즉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정보가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취재원보호보다 더 큰 공익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검찰이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지침을 보면 첫째, 수사의 개시를 위해 기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 둘째, 수사의 결정적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아닌 경우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셋째, 수사가 그 증거만을 가지고 이루어질 경우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 넷째, 기자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라면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들도 언론기관이나 기자를 대상으로 제보자와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강제수사 전에 이러한 미국검찰의 수사지침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취재원과 제보자의 보호 없이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은 기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취재원과 제보자의 보호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언론인의 직업적 의무와 양심이 전제된다면 취재원과 제보자의 보호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취재원과 제보자의 보호는 자유로운 언론취재를 보장하며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더불어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취재원과 제보자 보호에서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는 보호의 범위를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언론기관과 기자에 한정하고 않고 자유로운 언론 과정에서 폭넓은 보호를 의미한다. 물론 이는 좀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취재원과 제보자의 보호는 입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잠재적인 제보자와 언론기관 간에 그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명보도의 남용, 선정성, 정파성 등의 문제를 보이는 한국 언론의 특성상 취재원과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자칫 그들에게 특권을 누릴 자격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취재원과 제보자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통하여 사법행정기관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권수진·윤성현,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295, 형사정책연구원, 2016,
- 김민정, “취재원보호법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언론과 법』, 제14권 제2호, 2015.
- 이규호, “기자의 취재원 보호와 증언거부권”, 『민사소송』, 제16권 제2호, 2012.
- 이희훈, “취재원 비닉권과 취재원 보호입법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2018.
- 조재현, “공정보도를 위한 취재원보호의 입법방향” 『한국부패학회보』, 제23권 제2호, 2018.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소름이 “비아이 마약 끝까지 말려…사건 핵심은 ‘양현석’” 한서회가 전한 심경. <세계일보>. 2019, 6, 14. URL: <http://www.segye.com/newsView/20190614502974?OutUrl=daum>
- Anthony L. Fargo, The Year of Leaking Dangerously: Shadowy Sources, Jailed Journalists, And the Uncertain Future of the Federal Journalist’s Privilege, 14 Wm. & Mary Bill Rts. J. 1063, 1068, 2006.
- Amanda A. Konarski, The reporter’s privilege is essential to checks and balances being accessible to the American Electorate, 11 Seton Hall Circuit Rev. 258, 2014.
- Branzburg v. Hayes, 408 U.S. 665, 92 S.Ct. 2646, 33 L.Ed.2d 626, 1972.
- Martin Löffler/Reinhart 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C. H. BECK, 2005.

투고일자 : 2022. 09. 07

수정일자 : 2022. 09. 24

게재일자 : 2022. 09. 30

<국문초록>

## 공익신고와 취재원보호의 법적문제

정 신 교

취재원의 보호는 언론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취재원의 보호 없이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언론인의 직업적 의무와 양심이 전제된다면 취재원의 보호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취재원의 보호는 자유로운 언론취재를 보장하며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더불어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범죄관련 보도는 제보자의 신상이 공개됨으로 인해 제보자의 2차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히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의 보호는 관련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취재원보호의 범위를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언론기관과 기자에 한정하고 않고 자유로운 언론 과정에서 폭넓은 보호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물론 이는 좀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취재원의 보호는 입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잠재적인 제보자와 언론기관 간에 그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명 보도의 남용, 선정성, 정파성 등의 문제를 보이는 한국 언론의 특성상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자칫 그들에게 특권을 누릴 자격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취재원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통하여 사법행정기관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공익신고, 취재원보호, 공익제보자, 언론의 자유, 공익신고자보호법

